

정부·여당, 중동전쟁 피해 中企 1조9천억 추경 수혈

물류비·긴급자금 등 4대 축 집중 지원 김원이 “기업 지원 단절 막아야”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기화하는 중동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1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당정은 물류 차질과 고물가로 벼랑 끝에 몰린 현장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회 통과 즉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속도전에 돌입할 방침

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대응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6년 추경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망 마비, 원자재 공급 불안,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민생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기부는 사태 직후부터 ‘중소기업 피해·애로

TF’를 가동하고 피해 기업에 1대1 전담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당정이 뜻을 모은 1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청년 창업 활성화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등 4개 핵심 축으로 구성됐다.

우선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수출 바우처 한도를 높이고 긴급 물류 바우처 신설 및 전경위험 할증료를 직접 지원한다.

일시적 흑자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과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

별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해 단기 유동성의 습통을 띄워주기로 했다. 기존 정책자금의 만기 연장을 통한 상환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단기 구제책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담겼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지역창업패키지 신설 등을 통해 청년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I) 선도모델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회의에 참석한 산중위 위원들은 기업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현장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바우처 확대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정부 측에 거듭 당부했다.

김원이 산중위정책조정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기업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추경안 통과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농해수 추경안 당정 협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과 위원들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중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호선, 서삼석 정조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준병 정조위원장, 황중우 해양수산부 장관, 송옥주, 문금주 정조위원. /연합뉴스

“경자유전 원칙 훼손 근절”...농지 전수조사 공식화

“토허구역 심층조사, 대도시 주변 더 엄격” “투기 명확하면 매각 지시 등 강제 조치”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전수조사를 2단계에 걸쳐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윤 의원은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 구역에 대해선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도시 주변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투기가 명확하면 매각 지시도 하고, 처분을 유예했던 농지도 처분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 조치를 수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장 농업인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윤리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선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된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농식품부·해양수산부 항목도 논의됐다. 추경안에서 농식품부는 2천688억원, 해수부는 919억원을 각각 배정받았다.

민주당은 농어업 경영비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사업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을 제안했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 지원”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 공약

더불어민주당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맞춤형 생활 복지를 강화하는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1일 윤병태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나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월 기준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윤 예비후보는 민선 9기 출범 직후인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교통 지원을 이행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빛가람동 일원에 ‘어르신친화 놀이터’를 조성한다. 또한 올해 추가 확보한 공모사업 예산 7억4천400 만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경로당’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예비후보는 “민선 8기에서 다져온 노인 일자리 확대와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 등의 복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한 노후를 누리는 고령친화도시 나주를 완성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나주=정훈환기자

이개호 ‘장애인 돌봄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장애인 낮 활동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05년 지방 이양 이후 20년째 이어져 온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돌봄을 누릴 수 있는 통합 지원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임에도 거주 지역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은 물론, 본인부담금 유무까지 결정되는 심각한 불평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돌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에도 지자체 재정 현안에 따라 차우가 달라지는 것은 결코 정의를 못한 일”이라며 “복지의 질이 지역 예산에 좌우되는 ‘제도적 칸막이’를 허물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권리로 양질

의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조계원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이 대표 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3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도록 해 관광산업의 범정부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대상을 어린이에서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해 고령화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세종학당이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 제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한류 확산에 발맞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이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